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의 변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손열*

요약

5

2008년 위기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부르는 미국식 발전모델의 추락을 가져왔고, 다양한 대안론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었나? 이 글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의 담론의 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 회귀적 정책담론이 중의원선거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복지국가(생활정치)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기업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었으나 사회의 대항운동에 의해 뒤늦게 복지담론, 경제민주화담론이 전면에 부각되는 대조적 과정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주제어: 자본주의 담론, 세계금융위기, 신자유주의, 한국, 일본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I. 서론

2008년 9월 미국의 심장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지구촌을 거세게 뒤흔든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는 헐값에 팔렸으며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는 국유화되어 파산을 모면하였다.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일거에 증발하였고 이와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국 패권의 신화는 깨어졌다. 미국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급속히 확산되어 지구금융위기를 초래하였고 중국 등 신흥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견인해 온 실물경제 역시 급격하게 수축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안정적’이라 여겨온 국제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은 일거에 요동쳤다. 그간 금융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맡아온 국제통화기금(IMF)과 개도국 지원을 담당해 온 세계은행(World Bank)은 위기 앞에서 무기력하였고, 서구국가들로 구성되어 일종의 비공식적 조정위원회 역할을 해 온 G7 역시 한계를 노정(露呈)하였다. 위기 직후 G20을 통해 재정투입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지구 대공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여파로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0년경부터 본격화되면서 G20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장기전망은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최근 OECD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7%에 불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OECD 2012).

금융위기에는 현실 이면의 보다 장기적인,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깔려 있다. 구미 선진 경제권으로부터 신흥경제권으로의 경제적 권력이동(power shift)이 그것이다. 그동안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은 장기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런 경향은 2008년 지구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위기의 진앙인 미국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보다 어렵다. 아일랜드에 이어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리아가 국가재정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제 강국 독일과 프랑스가 이들을 아우르면서 유로권의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도는 불투명하다. 유로권 전체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를 두 축으로 한 아시아의 상대적 부상은 뚜렷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의 GDP 합은 조만간 G7을 넘을 것이며 2030년에는 세계GDP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IC 2008; Zakaria 2008).

이런 권력이동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OECD 국가군에 속해있는 동시에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지역공간에 위치해 이들의 활력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아시아 제일의 선진국 일본은 애당초 월스트리트와의 연계가 약한 까닭에 위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엔화가치의 급상승,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으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세계시장의 급격한 수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십 년 만에 또 한 차례 유동성의 덩어리에 걸려 사투를 벌였다. 신속히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저력을 발휘하였지만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체질 때문에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한일 양국의 경제실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본래 위기는 기존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고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여 시스템을 유동화한다(Gourevitch 1986). 기존 시스템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고, 지배연합의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정책담론을 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08년 위기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부르는 미국식 발전모델의 추락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G20과 같은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혹은 국가 수준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혹은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Cavanagh and Mander, eds, 2004; Rodrik 2007; Wolf 2008; Stiglitz 2009).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어떠한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왜 그런가?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었나?

이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위기 이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담론을 위기규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위기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따라 ‘위기대응’과 나아가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모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사례의 경우, 2008년 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처방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이면에는 무엇이 부적절하거나 작동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한 것인지가 분별되어 있다. 즉, 특정 정책이 데리다(Derrida)가 말하는 진리의 레짐(regime of truth)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서로 다른 분별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컨대, 1980년대 영국의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정부가 주창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인플레이, 고실업 등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원인을 국가의 과도한 개입(즉,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경제이념을 주창하였다. ‘국가는 비정상, 시장은 정상’이란 이분법을 내건 신자유주의 담론은 금융화란 경제적 권력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관념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정치 집단의 구호로 활용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투사되어 앞서 동아시아금융위기의 경우처럼 특정 주체와 정책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Harvey 2005).

그러나 담론의 생산은 본래 상태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과정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처리 이후 대두된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가 대표적이다.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도 개별국가의 변화는 결코 미국모델로 수렴되지 않고 강한 경로의존성의 작동에 의해 그들만의 자본주의가 갖는 요소들이 지속되는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논지이다(Hall and Soskice 2001).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고, 국가들에 따라 지배적 담론과 주변적 혹은 억압된 담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2000년대 들면서 닷컴 버블의 붕괴, 엔론 사태 등으로 미국모델의 신화가 부분적으로 동요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이 촉발한 다양, 다기한 제도 진화론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서로 다른 배합의 복합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던져 주었다(Thelen 2004; Thelen and Streeck 2006; Aoki, Jackson and Miyajima 2007; Streeck 2010). 또한 위기에 따른 충격은 대단히 불균등해서 종종 주변화된 행위자들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는 반면 기존 엘리트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여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곤 하였다(Klein 2007; Florida 2010; Rajan 2010; Reinhart 2009).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이러한 지식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 글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의 담론을 제시하고 왜 그러한 담론이 생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 회귀적 정책담론이 중의원선거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복지국가(생활정치)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기업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었으나 강력한 사회의 대항운동에 의해 복지담론, 경제민주화담론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대조적 과정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II. 위기의 담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과 기술의 신속한 변화에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위기를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모순의 결과로 보면서 케인즈 주의적 경제 질서의 부활을 요구하는 구조적 접근법이며, 끝으로 위기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서 권력관계의 근본적 재편 없이는 지속될 성질의 것이라는 과격한 입장이다.

첫 번째는 ‘정책실패론’으로서 (금융)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

를 은유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재해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패한 속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정책교정과 다시 번영이 찾아 올 수 있으리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담론이다. 그린스펀(Greenspan 2010) 등 과거 정책결정자, 월스트리트 등 신자유주의 시대 주류의 사고라 볼 수 있다. 이들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금융시스템이 내부 폭발한 것으로서, 정보기술 혁명에 의해 금융정보의 활용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현대금융이론이 결합하면서 금융혁신과 리스크의 계산, 구성, 통제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파생상품이 금융공학의 혁명아로 등장하였는데, 파생상품은 소수의 대형금융회사의 손에 집중되었고, 리스크에 대한 이들 간의 집합적 마비상태가 결국 전 세계 GDP의 11배에 달하는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어 낸 결과, 누가 리스크를 갖는 지 아무도 모르는 현상이 빚어졌고 그 결과 파탄의 연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위기는 그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금융환경이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즉, 기술혁신이 시장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뛰어넘을 것이란 믿음 속에서 초래한 일시적인 궤도 이탈의 순간이므로, 그 해법은 국가가 개입하여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여 비정상인 현재 상황을 바꾸는 과제가 놓여 있으며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표출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질서 역시 재건축이 아닌 기존 아키텍처의 부분적 보완 즉, IMF 기능강화, G8의 유지, G20의 적당한 활용 등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기존질서를 대체로 긍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미국의 경우 위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공화당의 견해이다. 공화당은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해 정치적 자원을 동원해 왔으므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과 반성보다는 정책실패 혹은 기술결정론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번 위기는 장기 성장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궤도 이탈(aberration)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담론은 주로 케인즈 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구조실패론’이다. 스티글리츠(Stiglitz), 크루그만(Krugman), 라이쉬(Reich) 등이 대표적이다. ‘용해/용융(meltdown)’, ‘심각한 비행 금융(seriously delinquent finance)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가미가제식” 행동,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 등 은유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09)는 몇몇 개인의 잘못된 역할, 특정 은행가와 정책 결정자(그린스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실제 위기는 경제적 관념, 믿음의 문제, 즉 시장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므로 시장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과도한 부채를 조장했다. 금융은 산업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증식을 거듭해 갔다.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위험감수의 문화(culture of risk taking)’ 속에서 왜곡되어 분배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시스템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20%정도가 실업이거나 비정규직이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특히 심해서 흑인의 경우 공식적 실업률이 48%이란 것이다. 미국의 금융실패는 미국경제 전반의 실패를 상징하며, 나아가 이는 미국사회의 보다 깊은 문제를 반영한다. 부의 불평등 심화, 정치 및 기업지도자들의 책임의식 결여, 장기적 관점 보다는 단기적 이윤추구 등을 통해 미국이 지난 25년간 그 균형을 잃었으며 불균형 모델을 전 세계에 강요하였다고 비판한다.

크루그만(Krugman 2009) 역시 문제의 근원은 자유 시장 근본주의(free-market fundamentalism)에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건 대통령 이래 탈규제가 만병통치약이라 믿는 데서 위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탈규제에 의해 번성한 파생상품이 금융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이라 믿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린스핀의 시인처럼 시장기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끝으로 라이취(Reich 2010)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무절제한 소비와 무책임한 대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배분의 왜곡에 의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소득 최상위계층의 정치적 동원능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케인즈 주의적 경제운영에 의해 대기업과 중산층 노동자간에 유지된 대타협 혹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즉, 대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주는 정부 개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중산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임금소득이 저하되는 반면 소득상위층의 부는 더욱 증가하여 대타협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중산층은 부채를 통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월스트리트는 파생상품을 개발, 이들에게 부채를 제공하면서 공전의 호황을 누렸다는 것이다. 결국 중산층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붕괴되어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왜곡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는 경제적인 것으로서 중산층의 구매력 저하에 의해 경제전체의 공급(생산)을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소득 최상위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그의 해법은 국내적인 재균형(rebalancing)으로서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케인즈 주의적 재분배 정책이다. “중산층을 위한 뉴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담론이 신자유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케인즈 주의적 견해라면, 세 번째 담론은 기본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은 “항상적 위기론”으로서 현재의 위기가 현대 금융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란 견해이다(Konings 2010). 즉, 위기가 정상이란 담론이다(‘new normal’). 이들은 지구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이 금융화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집단 간의 이익의 재조직화와 끊임없는 통제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일반대중에게 동등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일반 대중들에게 부채를 통한 자산획득의 꿈을 가져다줌으로

써 역으로 사회 엘리트의 부가 급속히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인의 신용과 부채가 확대되면서 은행은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기법의 혁신을 이루어 투자자들의 열망을 상품화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실재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담론은 신자유주의화를 폴라니(Polanyi 1957)의 사회로부터 탈각(disembedding)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부와의 재내장(reembedding)으로 본다.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국가의 역할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엘리트를 위한 제도를 해체하는 국가의 역할에 있다. 그 시작은 금융화의 담론을 깨는 것이다. 일반 대중도 금융화에 의해 제공되는 부채로 마이 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화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준 수단이었다. 금융부문은 고도로 복잡한 금융기법을 창조해 평범한, 일반 가계소득자로부터 이윤을 획득한다. 따라서 ‘금융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finance)’, ‘리스크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risk)’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깔려있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본원적 주장을 내어 놓는다. 신자유주의 담론에 가려져 있는 금융화의 추세를 되돌려 놓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제적으로도 월스트리트와 시티의 엘리트 권력구조를 깨고 남북(North-South) 간의 근본적인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세 담론이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에서 주로 발전되어왔음은 이례적이지 않다. 세계 학문의 중심지인 동시에 위기를 가장 치열하게 겪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위기의 이론 역시 현실정치의 양상과 직결되고 있다. 반면 케인즈 주의적 성향의 민주당은 구조 실패론에 친화적이다. 항상적 위기론의 기반인 마르크시즘이 미국의 이념적 지평에서 소수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주변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일본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

일본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월스트리트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 데다가 2000년대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 시기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가 리만 브라더스의 아태 및 유럽 부문을 인수하고 미쓰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C Financial Group)이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지분을 취득하는 등 세계금융위기를 새로운 영업확장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무역이 급격하게 수축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심각한 위축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정권 5년간 경기회복과 성장은 주로 대외무역이 견인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증대는 핵심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세계적 무역수축은 일본의 성장에 직격탄으로 다가왔고, 향후 정책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황탈피를 위해 수차례 재정출동이 이루어졌으나 경기 진작에 의한 세입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이끌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0%를 상회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제로년대”가 성립되었고 결국 2008년 위기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논쟁을 촉발하였다.

논쟁의 중심축은 역시 신자유주의 재평가이었다. 이는 2002-2006년 5년간 고이즈미 개혁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다케나카(竹中平藏)를 대표로 하는 그룹은 일본의 경제침체가 고이즈미 개혁 이후 정권들이 이를 지속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투입을 축소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공공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고이즈미의 정책방향은 관료와 족의원 주도의 정책결정구조를 관주주의의 하향식 정

책결정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임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 등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개혁세력에 포획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못하였다는 논지이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 긍정론인 점에서는 미국에서 나온 “정책실패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침체를 금융부문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의 문제는 금융부문이라기보다는 무역수축으로 인한 침체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는 기본적으로 외생적인 것으로서 일본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의 금융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 혹은 지구 불균형(global imbalance)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런 시각은 위기를 맞았던 당시 자민당 정권 아소 다로 수상이 반복한다. 그는 2008년 위기를 ‘백 년 만의 위기’로 규정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불균형을 지목하여 대외적 요인을 강조한다. 세계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불균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무역 흑자국, 특히 중국은 수요 중심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소 수상은 미국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적하는 견해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은 신중한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麻生 2009). 아소 수상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데는 자민당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는 국내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 수장은 2009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 연설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는데, 이는 위기에 직면해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외적 메시지인 동시에, 일본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내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이승주 미간). 아소 수장은 G20 정상회의 등 지구적 수준에서 거시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9년 7월 이태리 라퀼라(L'Aquila)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금융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

나라 거시경제 구조의 균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였다. 위기 국면이 시작된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민당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일본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총 12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위기극복 방책인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 구조를 창출하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소 정권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일본의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로드맵인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수법은 고이즈미 이전 과거 자민당정권의 단골전략이라 볼 수 있다.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세 개의 핵심 축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축은 저탄소 배출과 같은 에너지 혁명을 일본이 선도하는 것, 두 번째 축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활기찬 고령 사회’를 만드는 것, 세 번째 축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본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일본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민당 중심의 담론이 신자유주의를 비판의 중심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가운데 과거 국가개입에 의한 성장노선으로 회귀를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출발한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 또는 미국식 세계화가 격차사회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구조실패론”의 주장을 받는 것이다. 양극화(二極化)된 사회를 초래하는 등 일본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른바 “생활정치” 담론이 그것이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당수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고이즈미 개혁에 따른 사회적 격차문제에 - 혹은 개혁의 피로에 - 주목하여 도농격차,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이른바 “생활정치” 공약을 내어놓으며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를 이어 2009년 중의원 선거 승리로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으로 비판하고 ‘우애(友愛)’를 키워드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었다. 그는 비인간적인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가 지구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침식해왔으며 자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전통과 관습을 담고 있는 경제 질서가 와해 상태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미국이 주도한 금융 자본주의는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독특한 전통과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공동체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대체개념으로 우애가 담긴 신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우애를 주요 개념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의 구조적 대안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실천해야 하며 특히 달러기축 통화체제의 쇠퇴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鳩山由紀夫 2009).

구체적으로 하토야마는 우애를 “자립과 공생의 원리”로 풀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내정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지상주의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생의 경제사회를 건설”하고 쇠약해 진 일본의 “공(公)”을 부흥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이란 과거 지연,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스포츠 및 문화, 교육 등 자발적 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전후 행정의 대청소”이다. 정치주도에 의한 관료지배의 타파와 사업 구분이 그 핵심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사무차관회의 폐지, 내각위원회 활용, 각의의 실질화, 정부삼악회의, 행정쇄신회의, 국가전략실 등이 그것이다. 셋째, “지역주권국가의 확립”이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지방)의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었다. 자민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는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재무상은 재정적자의 한계를 인식한 후 소비세 인상을 공언했고 수상이 되었지만 정책(매니페스트)을 둘러싼 당내 분열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간 수상은 소비세 인상을 임기 내 연기한다고 약속한 당초 매니페스트를 준수하라는 당내 최대파벌영수 오자와의 반대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대신 간 수상은 2010년 6월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3의 길’을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국내 대응책을 제시했다. 1960-70년대 공공 공사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한 것이 제1의 길이라면, 2000년대 초반 시장 근본주의와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이 제2의 길이었으며, 제1의 길은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공공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거품경제의 형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제2의 길은 2000년대 초 고이즈미 내각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저하되며 디플레이션이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했다는 평가다. 간은 수요와 고용을 창출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의 길은 ‘강한 경제(強^い經濟), 강한 재정(強^い財政), 강한 사회보장(強^い社會保障)’을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2008년의 위기는 해외 수요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었으며 강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외 수요 기반을 만들고 부가 광범위하게 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제 해결형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菅直人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간 수상은 ‘신성장전략(新成長戰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과 재정 재건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FTA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1년이 제3의 개국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포괄적인 FTA 정책 추진을 2010년 각의에서 결정하고 TPP를 추진하기로 하였다(菅直人 2010). 이를 이어 노다 수상은 한편으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TPP 등 FTA 정책을 적극화하려 노력하였다.

VI. 한국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

이른바 발전국가의 전형이었던 한국 자본주의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자유화가 본격화되었고 김대중 정부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개혁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준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갔다. 정책과 함께 기업수준에서도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월스트리트가 세계표준(global standard)로 받아들여지고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이 진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큰 변화 없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등의 체념적 발언과 함께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칭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한미 FTA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런 속에서 분배 및 복지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친기업적 정책과 함께 일정수준의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2010)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라는 연구보고서는 2000년과 2008년 사이 한국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의 것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수준을 가늠해 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비교 대상이 된 OECD의 31개 국가 중 최하위인 31위였다. 또한 의료접근성,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규모 등으로 평가한 보건 부문에서의 삶의 질 역시 한국은 두 해 모두 비교 가능한 OECD의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2008년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뿐이었다. 한편, 실업률, 노후 안전(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55세-64세 인구의 고용률),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자 수) 등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제적 안전 부문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같은 기간 모두 OECD의 30개국 중 29위였다. 그리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평가한 분배 부문의 경우 한국은 2000년

까지만 해도 OECD의 30개국 중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2008년엔 무려 11계단이나 내려가 23위로 추락하였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상대빈곤율의 경우도 2000년의 한국은 OECD의 30개국 중 19위였으나 2008년엔 24위로 내려섰다. 한국의 소득 집중도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위 1%의 소득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7%대에 안정적으로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하더니 2010년에는 12%까지로 늘어났다(김낙년 2012; 최태욱 미간).

뒤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주행’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미FTA 비준 추진과 함께 수출을 위한 저환율정책이 강화되었고 감세정책이 실행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준의 상향 조정, 법인세 감세, 고환율 정책 등과 같은 친재벌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었다.

2008년 9월 리만쇼크와 세계금융위기는 한국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다. 외환위기 상황이 전개되었고 일본, 중국, 미국과 외환스와프 협정을 맺음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뒤이어 무역의 급격한 수축으로 경기침체가 닥쳐왔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출동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매진하였고, 외화 확보를 위한 수출 증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수출 대기업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 셈이다. 이런 결과로 2006년도엔 하위 20%의 33배였던 상위 20%의 총자산이 2011년에 가서는 무려 57배로 늘어났다. 5년 만에 자산 불평등 정도가 70%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노무현 정부 기간 연평균 39.6%를 기록하던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상승하였다. 취임 첫 해인 2008년엔 전해보다 무려 6.5% 포인트가 상승하여 46.2%가 되었고, 그 다음 해엔 다시 47.4%로 오르더니, 2010년에 드디어 51.4%

를 차지하며 한국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최태욱 미간).

이렇듯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 강화에 의한 경제극복 노선에 대해 야당은 이론적 무장을 통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제도권 밖인 시민사회로부터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강조되면서 신자유주의 대안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한 대안담론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 정치의제로 자리 잡았다. 당시 무상급식 의제가 크게 부각된 이후 복지국가론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다. 그리고 복지국가 담론은 바로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이어졌다. 대선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논함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민간과 공식 부문이 따로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광복절 기념축사를 통해 공생발전론을 주창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격차를 줄여가는 공생발전이 그 해법이라는 것이었다(이명박 2011). 그런데 이 공생발전론을 잘 들여다보면 시장과 기업에 대한 체계적 규제와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 관리와 금융규제라는 정부 역할을 넘어서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인식은 신자유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선사업을 복지 확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신자유주의 폐해 문제를 국가나 사회의 시장 개입 보다는 기업의 주체적 노력으로 풀어가도록 하지는 것이다. 바로 이 핵심 포인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론은 신자유주의보다는 다소 ‘따뜻한’ 자본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친화적’ 규제 정도에 그치며, 주역은 역시 기업이 맡는다. 결국 이 담론들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주체들이 계속 그 주도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의 대안 체제 모색에 착수한 이는 박근혜 의원이었다. 그는 2009년 5월의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를 만들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논거였다. 이후 2010년 12월 소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내놓았으며,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여당의 강령으로 공식화된다. 2012년 초 박 비대위원장은 당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손질하여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중심에 놓고 있는 새누리당 강령을 탄생시킨다. 강령만을 놓고 본다면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과거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가까운 것으로 크게 탈바꿈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2011년 12월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 강령을 발표하며 이제 당의 목표는 경제민주화의 달성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벌개혁, 한미 FTA 전면 재검토, 동일 노동·동일 임금 실현, 그리고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노후 복지의 획기적 강화 등을 당의 정강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른바 ‘사회시장경제’를 당이 추진해 갈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체제로 제안했다. 2011년 12월 말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시장경제란 “민주적 시장경제에 보편적 복지를 결합시킨 한국형 발전모델”이다(문병주 외 2011). 여기서 민주적 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공동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의 목표에 맞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 민주적 시장경제가 보편적 복지와 만날 때 분배

및 재분배 구조가 강력해짐으로써 경제적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시장경제체제가 탄생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시장경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궁극의 가치 지향에 있어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후자가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성 및 질서 확립을 통해 (독과점을 억제하고)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의 자유를 최종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라면, 사회시장경제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를 상위의 원리로 삼고 시장의 자율성은 이 궁극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만 허용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사회시장경제론은 민주당의 2012년 총선 공약을 통해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

V. 결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한일 양국의 자본주의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고이즈미 5년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피로현상과 사회적 반발이 드러나는 속에서 후속 자민당 정권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를 맞은 아소 정권은 위기대책으로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단행하였지만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일본자본주의 모델의 청사진은 없었다. 오히려 고이즈미 등장 이전 자민당의 20세기 복고적 정책을 추구하는 속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 대패를 자초하였다. 금융위기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 정권은 구조 실패론과 패를 같이하는 생활정치담론을 전면으로 내걸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정권에 남긴 거대한 재정적자가 주는 정책적 제약 속에서 정책추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들면서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수출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집권 이듬해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유동성의 위기에 처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본원적 고민 없이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중심 수출주도노선을 강화하였고 결국 사회의 대항운동에 직면하여 중간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은 거셌고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이 여야를 불문하고 전면에서 등장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금융위기가 일본에서는 여야 간에 고이즈미 퇴진 이후 이미 진행 중이던 자본주의 논쟁을 결정적으로 촉발하였고 1년 만에 정권교체를 가져온 반면,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담론싸움은 위기이후 3년이 흐른 2011년 하반기부터이었다. 조정자본주의 혹은 복지자본주의적 전통이 강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생명력이 강했다는 증거이다. 신자유주의는 1997년 IMF 관리체제이래 10년간 한국사회에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안고 2013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개혁에 상당한 저항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투 고 일 : 2012년12월31일]

[심사완료일 : 2013년01월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01월28일]

참고문헌

- 김낙년 (Kim, Nak-nyeon). 2012. 『한국의 장기통계』 (Hanguk-ui Janggi Tonggye). 서울 (Seoul): 서울대학교출판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문병주 (Moon, Byung-joo) · 김은옥 (Kim, Eun-ok) · 오상택 (Oh, Sang-taek). 2011. 『민
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Minjudang-ui Gachi-wa Jeongchaek Jihyangseong).
서울 (Seoul):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 이명박 (Lee, Myung-bak). 2011. “이명박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Lee Myeong-
bag Daetongryeong Je 66 Ju-nyeon Gwangbokjeol Gyeongchuks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116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CD=A000161116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116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검색일:
2012.11.29)
- 이승주 (Yi, Seung-ju). 미간 (Unpublished).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 (Global Geumyung
Wiigi-wa Ilbon)
- 최태욱 (Choi, Tae-wook). 미간 (Unpublished).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Global
Geumyung Wigi-wa Hanguk)
-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0.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Urinara-ui Gukga Gyeongjaengryeok Bunseok Chegye Gaebal). 서울
(Seoul):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鳩山由紀夫 (Hatoyama, Yukio). 2009. “私の政治哲學.” (Watashi no Seiji Tetsugaku)
『Voice』 9月号: 132.
- 菅直人 (Kan, Naoto). 2010. “第174回 国会における菅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Dai
174 Kai Kokkai ni okeru Kan Naikaku Souri Daijin Shoshin Hyoumei Enzetsu)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6/11syosin.html>(검색일:
2012.11.29).
- 麻生太郎 (Asō, Tarō). 2009. 『私の処方箋: 世界經濟復活に向けて』 (Watashi no
Shohousen: Sekai Keizai Fukkatsu ni mukete). ダボス会議における麻生総理大臣

特別 講演 (Dabosu Kaigi ni okeru Asō Souri Daijin Tokubetsu Kouen).

Aoki, M., Jackson, G., and Miyajima, H. 2007.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vanagh, John and Jerry Mander, eds. 2004.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Florida, Richard. 2010. *The Great Reset*. NY: Harper.

Gourevitch, Peter. 1986. *Politics in Hard T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eenspan, Alan. 2010. "The Crisis." *The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Spring): 201–261.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Klein, Naomi. 2007. *Shock Doctrine: Theories of Disaster Capitalism*. NY: Picador.

Konings, Martijn. 2010. *The Great Credit Crash*. NY: Verso.

Krugman, Paul. 2009.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New York: W.W. Norton & Company

NIC. 2008. "2025: A Transforming World."

http://www.dni.gov/files/documents/Newsroom/Reports%20and%20Pubs/2025_Global_Trends_Final_Report.pdf (accessed 29 November, 2012)

OECD. 2012. *Looking to 2060: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Paris: OECD.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Rajan, Raghuram. 2010. *Fault Lin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ich, Robert. 2010. *Aftershock*. NY: Knopf.

Reinhart, Carmen and Kenneth Rogoff. 2009.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drik, Dani. 2007.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iglitz, Joseph E. 2009. *Meltdown*. NY: Verso.
- Streeck, Wolfgang. 2010. *Re-Forming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reeck, Wolfgang and Kathleen Thelen. 2006.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2004. *How Institutions Evol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 Martin. 2008. *Fixing Global Fina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Norton.

ABSTRACT

Changes in the Discourse of Capital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ses of Korea and Japan

SOHN Yul

Professor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e-legitimated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as a representation of American capitalism, and opened the space for alternative capitalist modes. The paper explores how Japan and Korea produced discourses of new capitalism. Right after the global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to shift from neoliberal to developmental capitalism, but it lost to the rise of the welfare capitalism in the 2009 election. In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the neoliberal, “chaebol-oriented” capitalist line even after the crisis, but it was increasingly challenged by a more welfare-oriented, reformist discourse.

Keywords: calitalist discourse, global financial crisis, neoliberalism, Korea, Japan